

‘전북자치도당위원장 출마’ 민주 이원택 의원

“당원과 함께하는 신뢰정치 구현 힘 보탬 것”

도당의 정책 역량 강화 · 도민 간담회 활성화 등 제시

“도민 곁에서 함께 하며 전북의 희망 현실로 바꿀 것”

1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시·부안군)이 전북 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전북도당 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과 함께하는 신뢰의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동구·김슬지·김정기·나인권·박정규 도의원과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장과 이강세 부의장, 김광수·김두례·김원진·박태수 의원이 배석했다.

이원택 의원은 기자회견 출마선언문을 통해 당원 주권 중심의 대중적 전북특별자치도당을 만들겠다고 며,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을 만들어 당원의 목소리가 정당 정책에 반영되고, 국정과 도정에 반영돼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당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도당 체계와 운영의 혁신을 위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도당의 문턱을 낮추어 365일 열려있는 전북자치도당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전북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현장 중심의 유능한 정책 정당을 만들기 위해 전북자치도당이 중심이 되어 도정을 견인해

내고, 시급한 현안 해결과 국가 예산 확보의 중심축이 되도록 도당의 정책역량을 강화해 이슈와 정책을 정당하고, 전북자치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도민과의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전북과 14개 시군과의 실무형 당정 협의를 통해 현안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북의 대도약을 이끌기 위해 “새만금 인프라(철도, 항만, 공항 등)의 적기 구축을 통해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가고, 글로벌 농생명·문화관광 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전국 최초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단을 구축하고, 14개 시·군에 대한 내발적 발전전략을 통해 기후위기,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전북의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우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와 민생이 무너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무역수지는 200위로, 경제성장률은 1%대로 폭락하며,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로 올해도 사상 최대의 세수 핑크를 예고하고 있다.”며, “국회를 통과한 민생법안과 채산성 특검법 등 총 14회나 거부권을 행사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사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이 15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에 대한 취지를 밝히고 있다.

고 있어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검찰을 앞세워 야당 대표를 376회나 압수 수색을 하며, 죄인 취급하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가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음을 밝혔고,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복원시켰으며, 전북 국회의원의 의석수 10석

을 사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웠으며, 쌀값, 한우값 폭락에 맞서 양곡관리법, 농안법, 한우법을 대표 발의하였고, 특히 대통령의 양곡관리법의 거부권에 맞서서 삭발까지 감행하며 싸웠으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전북 출대에 맞서 싸우고 전북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질의응답을 통해 “진정한 전북도당의 이미지 개선을

을 위해 특히 전화 친절응대 시스템을 만들고 사무공간 구조도 변경하겠다.”며 “당원들이 사무실에서 회의도 하고, 답소도 하는 공간확보를 통해 당원들이 더 친숙하게 찾을 수 있는 전북도당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다. 또한, “14개 시·군을 모두 돌면서 전북 지역의 민원도 듣는 등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한편, 도당위원장 선거는 8월 2일 온라인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해 8월 3일 발표하게 된다. /이만호 기자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

“민주, 아바이 수령대회 국힘, 난장판 수령대회”

당 2기 지도부 첫 회의서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것”



전병헌 새로운미래 신임 대표는 15일 전남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경선을 두고 “제1야당 공당의 최고위원 경선이 아닌 이재명 수

령 찬양 강연대회를 방불케 했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난장판 전당대회”라고 꼬집었다.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기 지도부 첫 책임위원회의에서 “(전남) 새로운미래가 축적해 온 분위지에서 전당대회를 마칠 때 더 이상 민주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안에서 최고의원 예비경선을 했다”며 “결과는 그야말로 친명 일색이었다는 것이 모든 미디어와 국민들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정성과 다양성이 사라진 가짜 민주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우리 새 지도부가 뽄뽄 뽄뽄 당과 이 나라의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가짜 민주당을 대신할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분분해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여당을 향해서도 “난타전 난장판 전당대회가 벌어지고 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미평한 민생과 국정에 대한 건강한 논쟁과 토론은 실종됐다. 오직 최고 존엄의 문자를 받았으나 앞집(읽고 무시)했느냐(판이 회두)”라고 직격했다.

이어 “한쪽은 난장판 수령대회, 다른 쪽은 아바이 수령대회를 하고 있다. 비호감 정치가 지난 대선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새로운미래는 노답 정치권의 새로운 정당이 되겠다. 단순한 제3차 정당인 아닌 가짜 민주당을 대신할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

고향사랑기부 전액공제 최대 20만원으로 상향

민주 한병도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지자체가 기부금 30% 수준의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여기에 세액공제로 일정액을 환급하는 혜택까지 제공하면서, 시행 첫해에만 약 52만26,000건의 기부가 이뤄졌다.

현재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그런데 올해 2월



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2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구간과 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구간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각각 30%와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지정 기부 도입, 기부 한도 상

향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부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갑작스러운 재난·재해에 직면했을 경우, 신속한 피해 복구 및 대응에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건수와 모금액은 각각 14만8,083건, 199억8,132만원으로 전년 동기 15만5,153건, 233억 835만원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기부한도 상향에 발맞춰 세액공제율을 올림으로써 기부행렬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길 기대한다.”라면서 “기부금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에서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마중물일 수 있도록 제도 보완 사항을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만호 기자·익산=이재춘 기자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포함한 도의원들이 15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관련 설명회를 발표하고 있다.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중단하라”

전북자치도의회, “한전에 취약… 대책 세워야”

원전 내진설계 강화·주민대비 방안 마련 등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15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된 설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승우 도의장을 비롯하여 김희수 부의장, 이명연 부의장, 윤수봉·김민기·김정기·김슬지·박정규·국주영은·나인권·김동구·오현숙·김성수·서난이(순위 무순) 의원이 참석했다.

한빛원전 1·2호기는 1985년 12월, 1986년 9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는데, 한빛원전 1·2호기는 2025년 12월, 2026년 9월 각각 40년의 설계수명을 마치고 폐로될 예정에 있다고 하며,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으로 10년을 더 연장설치를 진행 중에 있어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빛원전이 안전에 취약하므로 수명연장 추진을 중단하고 안전대책부터 우선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6월 12일 한빛원전에서 42km 떨어진 부안군 행안면에서 4.8의 지진이 발생해서 국내 지진 중 6번째로 커서 호남지역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빛원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불안에 떨며 노심초사하고 있으니 도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한빛원전 1·2호기의 공칭회를 비롯한 수명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하며, 한빛원전 1·2호기의 원전 내진설계 강화, 최신 안전기술을 적용한 평가, 주민대피의 보호방안 등 안전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단속 권한 부여

민주 윤준병 의원, ‘사무장병원 근절법’ 발의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불법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따른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해수위)은 15일, 보건 의료부의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약사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사무장병원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약국 등은 현행법에 따른 개설 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비의료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면허 대여를 통해 개설한 경우를 의미한다.



실제,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사무장병원 등을 적발하여 환수 결정된 병원·약국은 1,712개이며, 총 환수결정액만 약 3,430원에 달한다. 그러나 환수율은 6.8%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그러나, 이러한 사무장병원 등은 과도한 권리 추구를 위해 운영돼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환자 안전

은 물론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하여 과잉진료는 물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은 물론, 건보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하지만 현행 단속체계만으로는 사무장병원 단속에 실효성이 낮은 상태에서 사무장병원 조사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도 단속권한을 부여하여 불법 개설 의료기관 적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학교폭력 대응시스템

보다 더 체계화한다

김대중 도의원, 학폭예방

대책 관련 조례개정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이 제412회 임시회 소관상임위원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김대중 의원은 “본 조례안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특히 최근 폭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 및 피해 등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 상담,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치유 프로그램, 보호시설 운영,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위한 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해 피해학생은 보호하고 가해학생은 선도하는 등 학교폭력을 예방·근절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